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3. 17(월)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41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4년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제1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연합뉴스티브이 (2014-11-047)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을 말씀 드리면 '201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및 (주)연합뉴스티브이와 201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방송사에 대해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위원장은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방송분야 3인, 법률분야 3인, 경영·회계 분야 3인, 기술 분야 2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3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은 지난주 3월 10일~3월 14일까지 총 5일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별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재승인 대상 4개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었습니다. 총점 1,000점 만점 중 (주)조선방송 684.73점, (주)제이티비씨 727.01점, (주)채널에이 684.66점, (주)연합뉴스티브이 719.76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재승인 기준은 지난 9월 기본계획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고, 650점 이상

이라도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50% 미달 시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각 방송사의 심사사항별 평가결과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소건을 말씀드리면 재승인 신청법인 4개사는 광고시장 정체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따라서 방송법상 재승인 유효기간은 3~5년이 가능하므로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 실적 점검이 필요함, 또한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고 종편 3사 모두 재방비율이 높은 반면, 국내제작 편성비율과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각 방송사업자별 주요 평가의견입니다. 먼저 (주)조선방송입니다. 계획 대비 30% 투자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자체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주)제이티비씨입니다. 신생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사후 자체심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청자불만이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심의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다음은 (주)채널에이입니다. 시사·보도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프로그램이 반복하여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심의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주)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상적 인력 구조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며, 노조 미구성을 이유로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차별화된 포맷 보도 형식을 승인 시부터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기존 방송사와 차별화된 보도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합뉴스의 TV 플랫폼 역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 차후 평가에 반영,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건에 대해 차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소송을 통한 평가회피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재승인 심사 시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사업계획 이행실적 매년 점검입니다. 재승인 이후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국산장비 도입 실적에는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비용 외에 시설설비 투자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엄격한 방송장비 분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 관련입니다. 종편PP의 방송시장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편PP들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고려할 때 미디어랩 등을 통한 비정상적 광고 영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감독과 발생 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령 및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승인 대상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되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한인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승인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붙임1>과 같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재승인 조건의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부분과 관련하여 이행계획과 반기별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 비율 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행실적 점검결과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등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3월 중에 승인장을 교부하고 5월 중까지 재승인 백서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중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3사 모두 공통으로 재승인 조건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두 번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세 번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네 번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 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섯 번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여섯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3사 모두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을 준수할 것이며,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그리고 (주)제이티비씨에 대해서는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한 것, 그리고 (주)채널에이에 대해서는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두 번째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세 번째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 네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 그리고 권고사항으로는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내온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

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참담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주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사무처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뢰도 이제는 없다, 어떻게 기자보다 상임위원이 결과를 늦게 알 수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보안에 신경을 썼는데 상임위원은 회의 직전에 페이퍼 보고 알고, 기자들은 내용들 다 알고, 정말 3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종편 허가 대상을 결정할 때도 상임위원은 모르고 기자들은 다 알고, 저는 도대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회의 앞두고 30분 전에 브리핑하고 그것을 바로 의결하겠다는 사무처의 기본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 드리면 작년 9월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실 때...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그렇게 보안을 유지했는데 상임위원들은 가장 늦게 알고, 그다음에 30분 전에 브리핑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이 보안 때문이었지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저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이 내용들을 좀 더..., 4년 전 사업계획서와 이번 사업계획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장께서 읽었던 사업계획서라 함은 이번에 낸 사업계획서이고,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가 도대체 편성비율을 몇 퍼센트로 했는지, 그다음에 투자계획을 얼마나 잡았는지 상임위원들 일절 모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대답만 해 보십시오. 보고를 안 했으니까 상임위원들 일절 모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들이 확인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며, 조건부에는 권고사항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매반기, 매분기, 매년 무엇을 점검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조건부나 권고사항이 잡힐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

것을 보고로 끝내고 상임위원들이 좀 더 내용을 살펴본 이후에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중편과 보도PP 재승인 심사의견서'라고 하는 것을 10분 전에 받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무국의 일 처리는 방통위원회 체제를 고무도장이거나 거수기처럼 생각하는 발상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애당초에 심사위원단 구성 자체도 상임위원 5명이 책임지고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편 옹호론에 가까운 사람들을 외부 추천이라는 이유로 반을 잘라내서 '14명 가운데 7명만 상임위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명은 여당 추천위원 쪽에서 정합니다. 3명을 하려 합니다' 이런 식의 기본구도 자체가 결국은 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어나 했다가 결국은 역시나 하는 결과로 귀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 갖 도착한 이 자료를 보지만, 이 자료조차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9시 반 티타임에 자료 좀 잠시 내밀고, 그리고 심사의견서는 회의 중간에 갖다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인지, 상임위원들은 사무국이 정해 주고, 약간 보수 성향의 심사위원들로 가득 찬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법적으로 완성이나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심의 미진입니다. 방통위의 심의 미진으로 이것을 의결한다면 결국은 퇴임하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고, 위원님별로 충실한 심의가 거처진 연후에 재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위원들보다 빨리 알았다고 양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우리 기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도 사무처가 지난 주말에, 일정을 보면 이것이 금요일에 대략 정리가 됐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주말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더라면 주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보안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워낙 기자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보시면 심사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심사를 해 왔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것을 가지고 재허가 보류, 또는 재허가 불허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으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2>번, <3>번이 과락이 있는 것이지요? 과락이 40점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번 항목과 <3>번 항목은 과락이 50%이고, 다른 항목은 40%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50%로 보더라도 그것을 다 상당히 여유 있게 상회하는 정도이고 과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 보류할 특별한 사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전에는 우리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례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야당 추천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비율을 나누어서까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이 과연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의결 보류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방송 관련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따라서 저는 정회를 한 번 거치더라도 오늘 의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상임위원보다 기자가 먼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무국에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저도 전에 실무를 담당했었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결과를 빨리 알고자 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사무국을 도와주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안이 자꾸 새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 단단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두 분 야당 상임위원들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심사를 열심히 하고 또 전문 심사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지만 여기에 조건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송의 허가장에 붙여 왔던 줄줄이 달린 조건들이 정말 다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나 규정에 다 있는 것들을 다시 여기에 인용하는 것이, 물론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조건의 의미에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일부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사업자들이 새롭게 내놓은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옛날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심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선임하던 것보다는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추천을 절반 받고,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해서는 여측에서 네 사람, 야측에서 세 사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위원장도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갑자기 사임을 표시했고, 다시 위원회 간담회에서 야측 위원의 추천을 존중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외부 추천기관에서 했지만 본인들이 시간상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최후에 결정될 때까지 상임위원들과 함께 간담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언론에 심사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언론인들이 내용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도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처음 들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기자들이 점수까지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처음 들어요? 왜 책임을 안 져요? 정보가 다 빠져 나갔는데….

○ 이경재 위원장

- 하여튼 일반 언론인들이 상임위원보다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보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점수는 우리가 당초에 기준을 말했듯이 650점 이상 되면 재승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재론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각 사에서 사업계획서를 당초 최초 승인시에 낸 것과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일일이 위원들에게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재승인 조건을 내는 것은 조금 순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승인 조건에 관한 것을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것은 이틀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인 의결은 19일에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결은 당분간 보류하고 19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UHD 방송 활성화 방안 논의 경과보고에 관한 사항 - UHD 방송 추진 협의체 및 700MHz 공동연구반 운영경과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UHD방송 활성화 방안 논의 경과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기획조정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UHD 방송 활성화 방안 경과보고와 관련하여 UHD 방송 추진 협의체 및 700MHz 공동연구반 운영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중복과 충돌 예방을 위하여 미래부 장

관과 방통위원장이 작년 4월 정책협력 MOU을 체결하였고, 그 일환으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작년 8월 700MHz 주파수 활용계획과 UHD 건전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 연구반 구성·운영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HD방송 추진 협의체』와 『700MHz 대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이 각각 구성되었는데, UHD방송 추진 협의체는 송도균 전 방통위원을 위원장으로 학계, 지상파·유료방송, 콘텐츠, 가전업계 등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었고, 700MHz 연구반은 김용규 한양대 교수를 반장으로 전문성·다양성을 고려하여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반 참여 명단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UHD 방송 도입계획 청취 및 시연회를 작년 12월에 개최하였고, 또한 미래부 장관은 UHD 방송 관련 지상파 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UHD방송 추진 협의체 활동 경과입니다. UHD 방송의 글로벌 동향, 지상파·유료방송의 UHD 도입방안, UHD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차수별로 주요 논의 내용은 <표>로 정리된 바와 같습니다. 분과별 논의 내용입니다. 동 협의체는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상파방송 분과·유료방송 분과·콘텐츠 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먼저 지상파 분과에서는 UHD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므로 방송 콘텐츠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지상파를 포함하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지상파방송사의 UHD 방송 도입을 위해서 지상파 주파수 700MHz 대역 배정과 전송 방식 표준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유료방송 분과에서는 이미 케이블 UHD 방송 기술기준 개정이 완료되어 본방송 실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금년 4월 UHD 전용채널 신설 및 서비스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콘텐츠 분과에서는 UHD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및 제작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제조사, 정부가 참여하는 펀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내 분과별 논의를 바탕으로 「UHD 방송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매체별 UHD 방송 추진일정, 콘텐츠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하는 UHD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발표할 목표입니다. 다음은 700MHz 대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활동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대역이 된 700MHz 대역 108MHz폭 중 이미 통신용으로 결정한 40MHz을 제외한 68MHz폭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해당사자인 방송·통신업계 의견청취, 심층 질의·응답 등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차수별 회의 내용은 <표>로 정리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내용 내용입니다. 지상파 방송 측에서는 차세대 방송인 UHD를 지상파로 방송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용으로 사용했던 700MHz 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적 활용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그밖에 공공부문에서는 통신망 기반 철도망, 그리고 재난 안전망 등으로 주파수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700MHz 대역을 활용하여 지상파 UHD 실험방송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3월 24일~12월 31일까지이며, 여기에서는 단일 주파수 이용가능 여부, 브라질 월드컵·인천 아시안게임 중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논의에서 도출된 쟁점 정리를 통해 정책 결정을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주요 쟁점은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첫째 단일주파수 이용 관련, 둘째 보호대역의 적정성, 셋째 대체 주파수 여부, 그리고 모바일 트래픽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반에서는 방송·통신업계 및 공공분야 이용계획,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구반 보고서를 도출할 계획이며,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하고,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용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고낙준 팀장이 일본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요?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일본이 올해 월드컵에서 4K 시험방송을 하고, 2년 뒤 올림픽에서 4K 본방송을 하고, 또 2년 뒤에 8K 시험방송을 해서 2020년에 8K 본방송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추진협의체가 정·관·재·산·학 중심으로 언제 발족했지요?

○ 고낙준 정책개발팀장

- 작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우리보다는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무엇으로 UHD 방송을 삼기로 했지요?

○ 고낙준 정책개발팀장

- 현재로서는 위성파 IPTV, 케이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상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고낙준 정책개발팀장

- 현재 일본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에게 이미 할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에서 쓸 수 있는 여유 주파수 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일본에서 위성만으로 4K를 방송할 경우에 도달률이라고 할까, 시청자들의 선택폭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 **고낙준 정책개발팀장**

- 현재 일본은 TV 내장할 때 지상파 채널뿐만 아니라 위성 채널을 가지고 있고 민방은 별도의 수신기 없이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50% 정도 수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그렇게라도 위성만으로 국한한 이유는 지상파의 주파수를 건드리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파수가 MFN 방식이지요?

○ **고낙준 정책개발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MFN와 SFN이 어떻게 다르지요?

○ **고낙준 정책개발팀장**

- MFN 방식은 방송국마다 별도의 주파수를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SFN은 한 방송권역에 여러 개 방송국이 한 주파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SFN 방식으로 하면 주파수 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1997년에 우리가 주파수를 배분할 때 왜 MFN으로 갔지요?

○ **고낙준 정책개발팀장**

- 미국식을 추진하면서 미국식 방식에는 SFN이 안 됐기 때문에 MFN 방식으로 갔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현재 지상파가 UHD 주파수를 달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SFN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 **고낙준 정책개발팀장**

- 예, 그렇습니다. UHD 방송은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기술방식은 SFN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SFN 방식이 구현되는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지만 방송사 주장에 의하면 SFN이 되고, SFN이 되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UHD 방송을 도입한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MFN 방식을 쓰는 HD방송을 종료해서 주파수를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주장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의 기본 인프라인 MFN을 SFN으로 바꿀 경우에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얼마쯤 추산합니까?

○ **고낙준 정책개발팀장**

- 지금 상태에서 금액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전환비용으로 참조해 보면 디지털 전환 때 약 10년간 2조원 가량의 돈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하여튼 SFN이 UHD를 지상파에 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재원 등을 포함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군요?

○ **고낙준 정책개발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든 지금 협의체에서 충실하게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접국가인 일본에게 장비산업이나 콘텐츠산업에서 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지상파와 유료미디어 간의 싸움, 혹은 이런 장비업체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국민적 이익이 되도록 합의점과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UHD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부위원장님 우려사항을 협의체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UHD TV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유료방송은 빨리 가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지상파가 여러 가지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해와 금년에 방통위 또는 미래부에 지상파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지금 스터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고, 특이할 사항은 미래부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실험방송 주파수를 3개 회사에 부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연말까지 시험방송을 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SFN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UHD 핵심의 주파수 문제로 좁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주파수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가령 이것이 방송으로 쓸 것이냐, 통신으로 쓸 것이냐 하는 용도가 있는데, 어떤 것이 국익에 가장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지요.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SFN이 연말까지 시험방송해서 잘 된다면 700MHz로 많지 않은 주파수를 가져도 가능하니까 그 가능성은 높아지겠지요?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적용해 보지 않은 기술이니까 이것이 기술적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SFN이 잘 되면 700MHz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긴다면 지상파에 UHD로 가는 문제가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실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생각을 바꿔 보자, 인식을 전환해서 우리도 지상파에서 위성채널을 이용하면 어떨까, 위성채널을 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질문에 일본의 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파수의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통신에서 700MHz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서 주파수를 통신에 매각을 한다면 적어도 1조원 이상 되는 많은 돈이 들어올 텐데, 아까 SFN을 하는 데도 2조원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파수를 판 대금으로 위성을 쏘다면 조사해 보니까 5,000억원~1조원 사이면 위성을 하나 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파수를 팔아서 생긴 자금으로 위성을 쏘고, 그다음에 그 위성을 지상파에 무료로 제공해서 지상파 본연의 업무인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하게 한다, 그러면 지상파 연합으로 해서 관리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성을 관리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파수 문제가 해결이 쉬워지는 방법이 있다, 지금 2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SFN을 통해서 700MHz를 작게 받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한 분야는 위성을 이용해서 하는 분야가 없겠느냐, 다양하게 논의를 해 보자, 그러면 주파수 해결이 쉬워질 것이다, 효과의 첫 번째는 주파수 해결이 쉬워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상파 채널을 위성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통일 아닙니까? 통일을 대비해서 위성을 통한 지상파의 한반도 전체 가시청 권역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지는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영지역 처리 문제, 또는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은 됩니다만 주파수 활용도를 아주 극대화하고 지상파의 UHD 방송을 빨리 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제3기 방통위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깊은 논의를 통해서 아주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임기가 끝났으니까 다음 방통위, 또 회의체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위성 문제는 미래부와 관계가 있고 또 현재 KT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도 있으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신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오늘 위성UHD라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나왔는데 언뜻 떠오르는 것은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테나와 셋톱박스는 또 이용자들에게 부담되겠구나’ 그런 부담들도 고민해 보면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700MHz 대역 쪽에 108MHz 폭 중에 40MHz를 용도지정하고 68MHz를 용도지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 당시 법을 만들던 입법정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2가지 이야기를 하려는데 당시에 홍성규 부위원장, 그다음에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저 4명이 40MHz폭만 이동 산업용으로 지정하고, 68MHz는 지상과 할당을 전제 하면서 용도지정하자고 했을 때 당시 위원장이 굳이 용도지정하지 않고 그때만 해도 108MHz 다 하자고 했다가 상임위원 4명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결국은 68MHz를 용도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임위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쪽 보면 방송용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입법정신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당시에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68MHz 대역을 남겨 놓았는데 이것을 미래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지난번에 CES 갔다 와서도 조기 주파수 용도지정과 할당, 그다음에 시범방송, 표준화 3가지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래부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홍 위원께서 위성UHD까지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라도 해서 주파수 조기 할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회적 외압들과 방법들을 고민하게 만든 것, 이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산업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혜택을 준다면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강력하게 더 미래부를 압박해야 하는 것이고, 미래부가 이것을 가지고 버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당시에 108MHz를 다 확정하지, 68MHz를 남겨놓았고, 그 남겨 놓았던 데 대한 기본적인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할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적으로나 시청자 이익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미래부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파수 조기 할당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지막 위원회에서 제기했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 상황까지 와서 UHD를 왜 여기에서 의제로 올려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주파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이 문제는 한국 방송산업 영역에 있어서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저도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UHD TV의 문제는 물론 가전사를 중심으로 방송사들까지 많이 영역을 넓혀 가고 싶어 하고, 차세대방송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새로 떠오른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주파수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주파수 물론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제가 보기에 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콘텐츠라고 봅니다. 준비반에서는 콘텐츠 분과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나 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가 정말로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콘텐츠가 되는지 하는 것도 못지않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방통위와 미래부 간에 그런 대결구도처럼 그렇게 몰아갈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요건, 그다음에 주파수 기술적인 요건, 콘텐츠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문하겠습니다.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4분 폐회 】